

붙임1.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주식매매프로그램 판매라며 거부

차**씨는 A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광고 문자를 보고 1년 간 서비스 이용 조건으로 350만원을 지불함. 서비스가 신청인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입 후 한 달이 지나 A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주식매매프로그램 판매 계약이라며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거부함.

[사례 2] 1년 계약 후 해약요구 하자 유료 2개월 무료 10개월 이라며 과다 이용료 청구

이**씨는 B사 상담원의 전화권유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기로 하고 383만원을 지불함. 서비스 불만족으로 한 달이 지나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1년 중 첫 2개월만 유료이고 나머지 10개월은 무료이기 때문에 유료기간 1일 이용료가 63,000원으로 계산되어 환불 금액이 거의 없다고 함.

[사례 3]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정상가격이 1,800만원이라며 환급 거부

안**씨는 C사 직원의 전화권유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기로 하고 600만원을 지불함. 주식투자 손실로 C사에 해지를 요청하니 서비스 정상가격이 1,8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환불받을 금액이 없다고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라며 거부함.

[사례 4] 타사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금액 반환 약속 불이행

박**씨는 D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기로 하고 300만원을 지불함. 계약 당시 D사 담당자는 2주 내에 타사 이용료 1,100만원 전액 환불 받아주고 미이행 시 300만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함. 타사 환불은 6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고 환불금액도 1,100만원이 아닌 50만원만 돌려받음. 이에 D사에 약정 미이행에 따라 300만원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사례 5] 전화로 환불신청 했으나 처리를 지연하며 이용금액 과다 청구

박**씨는 E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500만원을 지불함. 3개월이 지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해지를 요구함. 해지 신청 이후 1개월이 경과했는데도 환급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E사에 직접 연락해 확인해 보니 해지 신청된 사실이 없고 담당자는 퇴사한 상태라며 추가로 1개월 이용료를 청구함.